



마을공동체

교육 교재

마을공동체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제 1 탄

— 전 문 분 야 —

마을공동체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제1탄

마을공동체

교육 교재

전/문/분/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1판1쇄 인쇄 2013년1월7일
- 1판1쇄 발행 2013년1월10일

- 발행일 2013년1월10일
- 발행인 유창복
- 발행처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도서명 마을공동체 교육교재. 전문분야
- 지은이 이 호, 강원재, 이치열, 김미정, 송창석
- 제작처 북디앤에스

_본 출판물은 비매품이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_본 출판물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354-2642

· 팩스 02-354-9280

·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3층

_차 례

1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과 제도를 중심으로”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_005

2 문화예술과 마을공동체

강원재(OO은대학연구소 1소장) _091

3 공동체 교육의 대안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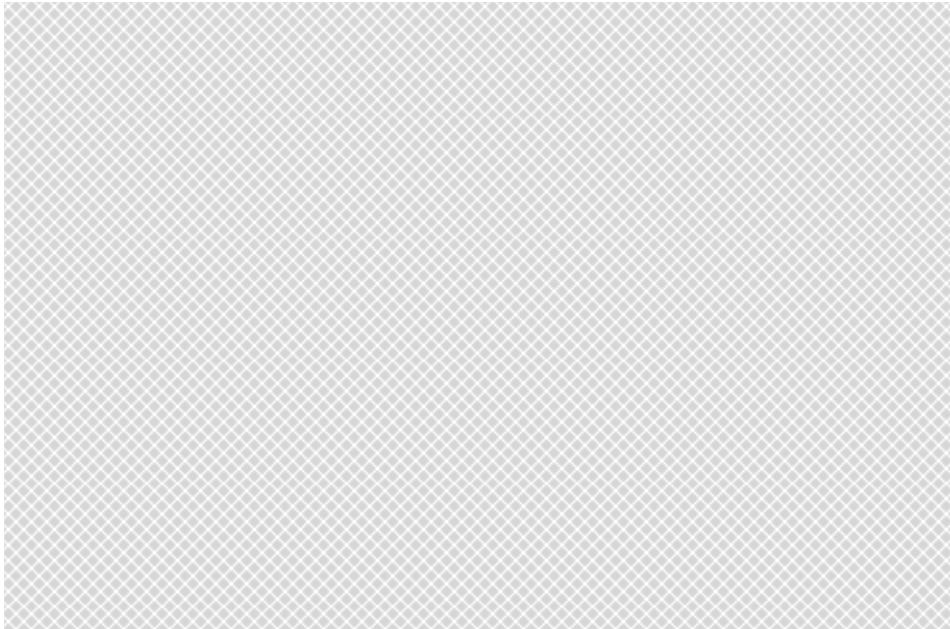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치열(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_157

4 집을 생각한다

김미정(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부장) _227

5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_ 송창석(희망제작소 부소장) _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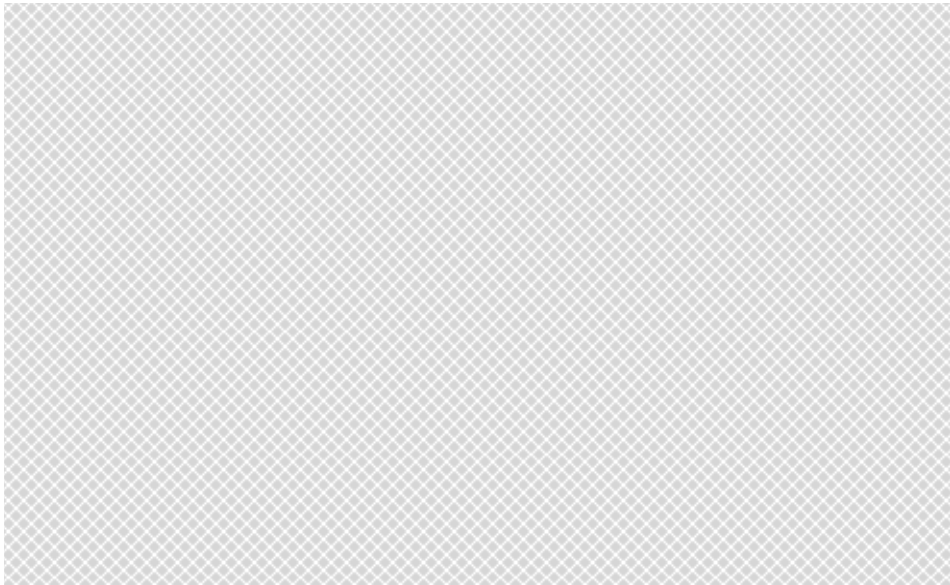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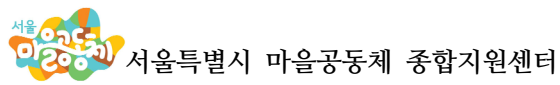
01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과 제도를 중심으로”

_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제도를 중심으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이 호

_ 교안의 취지와 내용 요약

- 본 교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시민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대안적인 상호부조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즉 마을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마을은 단순히 그 구성원들 간의 내적인 관계망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러한 상호부조적 관계망을 보다 확산하고 강화시키는 지속적 과정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따라서 마을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과

_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정과 별개가 아님을 설명한다.

-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등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참여라 할 수 있으며, 이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의 공동체적 역량강화가 일어나는 과정만큼 주민자치와 마을이 형성·발전할 수 있다.
-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자발적 활동들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도 본 교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2 : 왜 마을공동체 인가?

1. 성장과 경쟁이 낳은 폐해의 극복



사람과 환경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남발

3 : 마을 공동체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에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그대로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최근 기후도 원래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의 3한(寒)4온(溫) 등의 기후적 특성이 사라지고 아열대 기후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올 해(2012년) 여름에 자주 발생한 ‘게릴라성 폭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기습적 폭우는 기존에 우리가 표현하던 ‘게릴라성 폭우’라는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아열대 지역의 계절 중 우기(雨期)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일상적인 자연재해 역시 과거와는 그 빈도나 규모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빈번해졌다. 이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새로이 사람들이 적응해야 할 과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파괴한 자연의 역습이라 할 수 있다.



4 : 빈부의 격차

세계적으로 날로 심해지는 빈부의 격차는 이미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른쪽의 사진은 서울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뒤로 보이는 고층건물은 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타워팰리스’이고, 그 앞 쪽의 사진은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이다. 구룡마을은 전형적인 빈곤계층 거주지인 판자촌이다. 이러한 사진들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빈부격차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 악순환

5 : 청소년 왕따와 일상적 폭력의 문제

친구들 간의 우정보다는 극심한 상호경쟁에 내몰리는 것은 비단 어른들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류대학 진학의 지상과제에 내몰린 학생들은 그 외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체험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청소년 사회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자신들과 다른 친구들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발현된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결합해 다른 이들을 왕따 시키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큰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는 어른들의 자세는 왕따와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또 다른 폭력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들은 그러한 협박에 별로 위축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전과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주변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들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준 이는 누구인가? 우리 어른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제도적 폭력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다.



6 : 청년실업의 문제

피부로 느끼는 면에서나 각종 통계들을 파악해 봐도 청년 실업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현실적 꿈을 꾸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청년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예정된 실업상태에 처해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누르고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 소수에 포함되기 위해 자신을 극심한 경쟁에 내모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안정적인 상장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한다(이원재(2012),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6쪽). 그렇다면,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한다고 해도 결국 열 중 아홉 명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명에 들어가기 위해 청년들은 자신들의 모든 걸 희생하고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을 내던진다.



7 : 노인인구의 증가는 빈곤계층의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 통계로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2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지 사회 전체의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노인 당사자들의 열악한 경제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노인 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절대빈곤계층이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위험에 대해 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을 희생해서라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우리를 내모는 것이다.

결국,



개인들은 지극히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8-9 : 결국 사람들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개별화, 파편화,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이는 결국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더욱 경쟁 속에 살아가도록 강제한다.



10 : 이러한 우리 세상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우리 자녀들은 현재 행복한가?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적자생존

찰스 다윈, 종의 기원

행복의 조건
인식의 전환

상호부조론
크로포트킨

만물은 서로 돕는다

11 :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적자생존에서 상호부조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처럼 경쟁 위주의 사회로 고착화되어 가는데, 이를 합리화하는 논리는 사회학적 철학적 논리보다는 생물학적 논리에 근거한다. 근세 서구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계약이 가장 합리적인 사회의 작동원리라 주장하였다. 그런데, 자유로운 계약이라 함은 힘센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래도 힘 세고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계약이 사회발전의 가장 합리적 토대라는 이러한 이론은 불평등한 계약을 용인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근본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연구하면서 ‘적자생존(適者生存)’이란 개념을 진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하였다. 즉, 그 환경에 적절히 적응한 생물 종은 살아남아 그 종을 번식시키고 번영을 구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생물 종은 도태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그 안에서 살아남는 이들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연구를 통해 적자생존과는 전혀 다른 자연법칙을 발견한 학자가 있었다. 러시아 학자인 크로포트킨은 적자생존 이외에도 상호부조적 관계를 통해 자기 종을 번영시킨 자연법칙이 엄연히 존재함을 발견하고 입증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환상에 깊이 빠져 있고, 또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에서 이 이론은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 찰스 다윈의 논리가 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으로 매우 일반화된 자연법칙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이와 달리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파되고 있었다.

크로포트킨의 연구결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발전에 있어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 역시 자연의 법칙에서 충분히 발견되는 것임을 설명해 준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상호경쟁이 아닌 상호부조(相互扶助)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를 충분히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행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겪은 것과 같은 이러한 사회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질적 민주주의로의 발전

시민?
市民?
Citizen?



12-13 : 시민의 의미

마을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외에도 다른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시민’이라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가? 보통은 시민을 특정한 시에 거주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시민’이라는 말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생긴 용어이다. 사전에서도 시민을 ‘특정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시민이란 용어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로서, 그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였다. 시민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인 것이다.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집행권한만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을 뿐이다.

변화된? 민주주의

→ 선거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

현실적 필요:

- 직주(職住)분리
- 주민 간 충돌하는
이해 조정의 어려움



14 : 간접민주주의의 태동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민주주의는 오늘날에는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다. 그것은 고대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의 직접 민주주의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異見)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해 봐도,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해 보이지도 않고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와 달리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즉, 직주(職住) 분리와 생활양식(life style)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제 지역은 동일한 이해를 지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 지역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과거 아테네 시민들의 수는 지금의 시민들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었고, 단순하면서도 동일한 생활 패턴 즉 많은 부분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의사결정이 가능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가 오늘 날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많은 의사결정이 시급성을 다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주하는 사회의 인구학적 지리적 범주를 고려할 때 아테네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그리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근대 이후 발전한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취하였고, 오늘날에도 전세계에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간접 민주주의의 대표적 형태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거로 선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이들에게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한 사회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치적으로 각성된 사람을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주체 역시 시민이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 의해 사회를 통치하겠다는 이념에 다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 원리야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라 볼 수 있겠다.

민주주의의 위기 대두

- 시민의 주권 상실
"오직 선거일에만 자유로울 뿐..."
 - 삶의 질에 대한 해답 요구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 ➔ 거버넌스(Governance) 도출



15-16 :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

하지만, 오늘날 제도화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러한 시민들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타인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폐해 때문이다. 시민들은 점차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와 상반되는 문제점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한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정작 권력의 주체인 시민들이 점차로 자신들의 권리를 상실당한 채 의무만을 강요당하는 수동적 피지배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각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외에도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가?’라는 의문으로도 제기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우리가 아는 한 가장 훌륭한 정치체제라면,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는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의의가 있을 뿐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질적 민주주의로까지 발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는 별개가 아닌 상호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시민들이 그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한다면,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이 시민들의 구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일부 정치 엘리트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그러한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구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제기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결국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보다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대안을 사람들은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일방적 통치(governing)와는 다른 거버넌스(governance)라 칭하였다. 이는 일본에서는 협치(協治)라고 번역하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평등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고, 그 사회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20여년 전에 유럽에서 출현하여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이러한 대안이 공감을 얻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와 시민들의 직접적 결정권을 강화하려는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달성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및 사상적 기반들도 속속 등장·정립되고 있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참여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집약된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바로 간접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도 시민들의 참여와 권한 부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10년간 전세계적으로 주민투표 등 직접 참여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직접 결정권을 부여한 사례는 1980년대 10년간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전 사회적 시도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에서만 최소 400여 개 이상, 전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도시에서 참여예산이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7 : 이러한 대안이 현실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으로도 그러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참여는 개인의 이해와 욕구로부터

- ➔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정치
- ➔ 지역정치의 주제는 보육, 교육, 주거, 복지, 문화, 개발 등 주민들의 생활과 가까운 이해와 욕구를 다룸
- ➔ 지역사회에서의 직접 참여 용이



#18-19 : 지역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는 지역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경우,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역정치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주제들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인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의 정치를 생활정치라 부르기도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은 중앙정치의 이슈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더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 계기는 자신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경쟁 대신 삶의 질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일이기도 하다.

-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해 나가는 원리
 - ➔ 주민자치(主民自治)
 - 영향력 강화(empowerment)
 - 참여와 이해관계의 조화
- 외적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도 함께 따라야...
 - 사회적 연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공정무역 등

20 : 주민자치

이렇듯,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를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을 주민자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라는 개념 속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운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한 자치의 역량을 주민들이 강화시켜 가는 과정에 대한 지향도 담고 있다. 주민자치가 오늘날 실천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영향력 또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empowerment)과 더불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engagement)시켜 가는 과정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즉, 자치에 필요한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참여’이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가 질적으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외적 환경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까지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사회적 연대의 실천 등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1992년 리우정상회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간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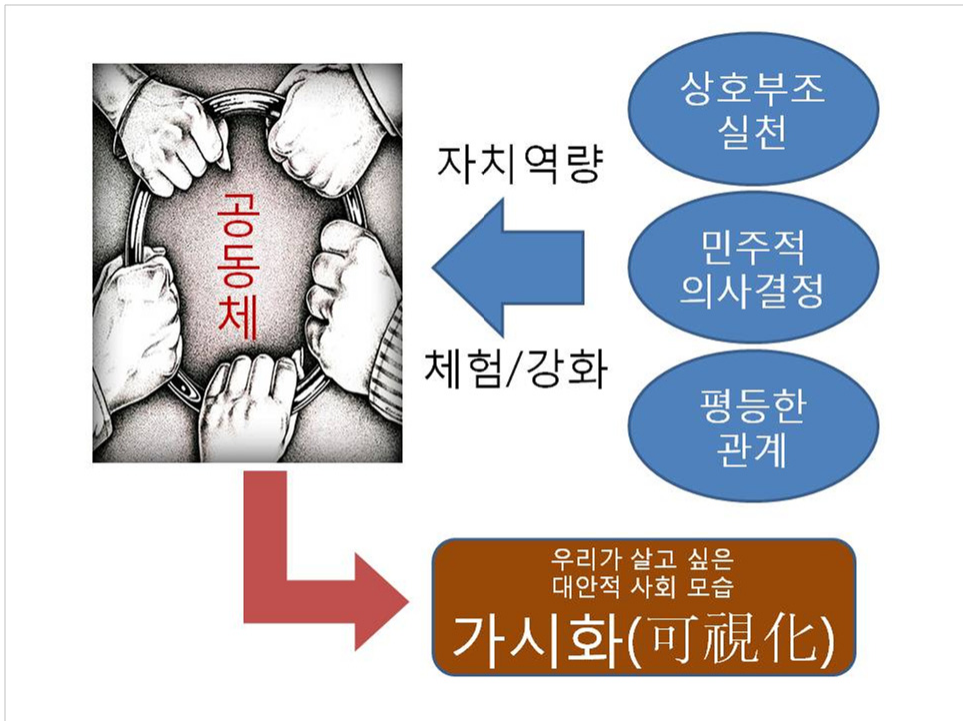
21 : 지역의 조그만 대안적 실천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강력한 방법

지역사회로부터 일어나는 외적 환경의 변화와 일상생활 태도의 변화는 오늘날 생존의 위험에 처해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참여행위는 결코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세계적인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로도 지역에서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잘 표현한 구호가 ‘Think Globally, Act Locally!’이다. 이 슬로건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전세계로 급격히 번져나갔는데,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라는 직역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의 회의가 세계적인 빈부격차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다루는 것이었고 그러한 고민의 산물 즉 합의된 내용이 이

슬로건으로 표출된 것임을 감안하면, 당시 합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의역(意譯)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전세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먼저 지역에서 구체적인 실천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한 조그마한 변화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힘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그만 실천은 단지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즉, 스스로 대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간디의 예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로 귀국해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해 맨 처음 실천한 일은 공동체를 만들고 물레를 돌려 자신이 입을 옷을 스스로 지어 입는 것이었다. 이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거두는 막대한 자본축적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즉,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목화를 싸게 구입해서 영국에서 옷을 만들고 이를 인도 민중에게 비싸게 파는 행위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단순히 폭력을 쓰지 말자, 저항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보다 대안적인 생활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혁신적인 사회개혁이라고 믿었고 이를 세계에 주창했던 것이다.



22 : 주민자치와 공동체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개념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인가? 앞에서 주민자치는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는 시민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구성원들 간에 경쟁이 아닌 상호부조적 관계를 맺는 체험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공동체가 말로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스스로 훈련받을 수 있는 유력한 실체라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공동체는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실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제 당위적 설명이나 설득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사회와 세상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관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23: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 및 추진과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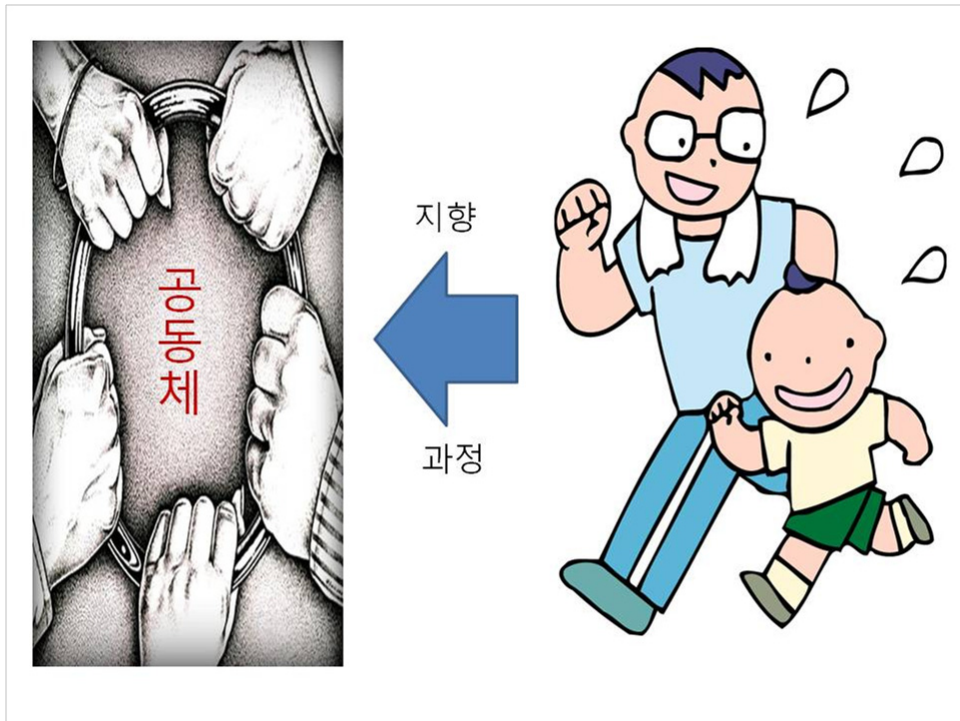
마을공동체란?
=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기반한 공동체!!

24-25 : 지역과 달리 마을은 물리적 공간 범주가 아닌 공동체적 범주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아닌 ‘마을’을 언급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통 공동체의 공통적 요소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힐러리란 사회학자가 정리한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 tie)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의 이 세 가지 공통 요소 중 맨 처음에 언급된 ‘지역성’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같은 지역을 매개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장 내의 공동체, 온라인 공동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마을에는 공간적 의미도 분명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마을이 강조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공동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 ◆ 공동체는 고착/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며
- ◆ 다만, 보다 긴밀한 내적 관계, 사회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지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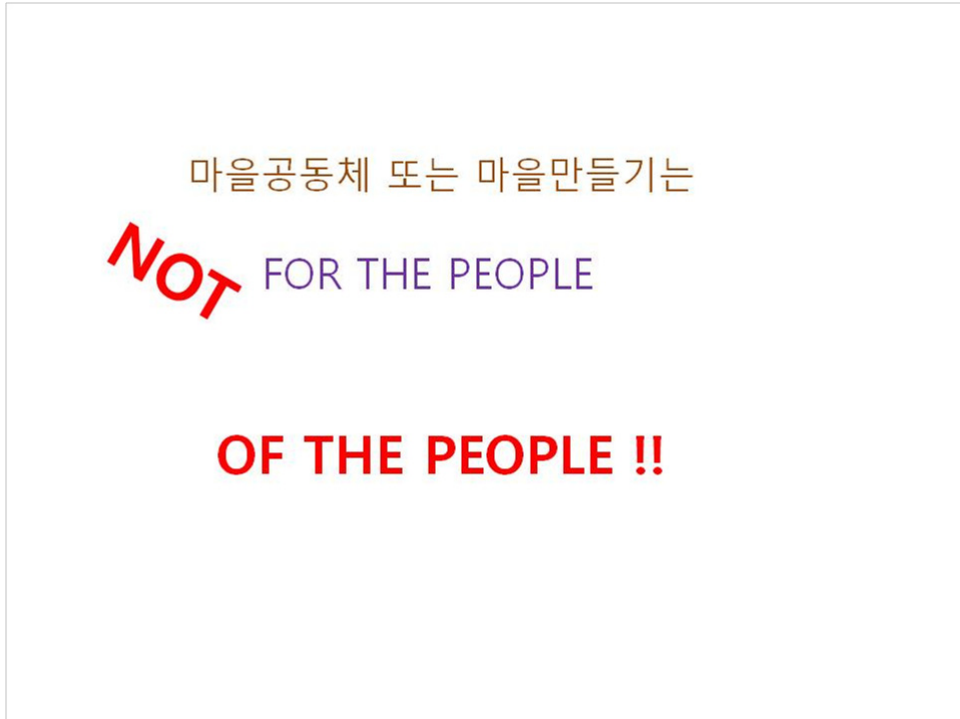
26-27 : 공동체의 의미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 의미에 대한 넓은 공감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도들을 낳고 있듯이,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되어져 왔다. 문제는 어떠한 실천들이 공동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어떠한 실천들은 그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쾌한 구분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념 규정을 하는 순간 공동체는 그에 걸맞는 '나와는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한정 지워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공동체적 내공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가 일반 주민들에게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닌, 나도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매우 느슨한 형태로부터 매우 긴밀하게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비록 공동체적 관계의 정도가 느슨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체라 하지 않을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공동체는 하나의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현실 사회에서의 실천은 그 지향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것은 공동체고 저것은 공동체라 할 수 없다'는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비록 시작이 느슨한 관계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는 공동체'운동'으로서 현실 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28 : 또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을 위한 것(for the people)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of the people)이다. 즉,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행정의 정책과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은 다만 그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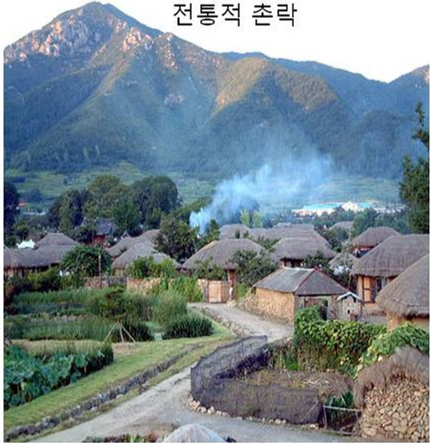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

≠

전통적 촌락



- 엄격한 위계질서
- 민주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 공동체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님

29 : 도시에서의 마을공동체운동은 과거의 촌락공동체를 재현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과거의 촌락공동체를 도시에서 재현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 촌락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내적 관계망에 있어서는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도시 공간과는 다른 공동체적 질서와 관계망을 지닌다. 하지만, 전통적 촌락공동체는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몇 가지 핵심적 가치들이 빠져 있다. 그것은 전통적 촌락공동체가 상호부조적 관계망이라는 공동체의 핵심적 요소를 충족시키지만, 그 관계망을 좀 더 들여다보면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촌락공동체가 평등치 못한 관계, 비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촌락공동체는 공동체의 필요조건을 담고 있지만, 충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전통적 촌락공동체를 현대 도시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방법과 모습을 대안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주의

- 내적인 긴밀한 관계
 -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 공동의 유대(Common Tie)
- 사회적 공동선 실현(개방성)
- 공동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공동체적이어야...

→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는

- 평등하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부조적 관계 형성
-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 대안으로 변화시키려는 지향으로 발전해야...

30 : 오랜 동안의 공동체 경험을 지닌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핵심적 개념들로 긴밀한 상호부조적 관계망,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 공동체적 방법을 통한 공동체 건설을 강조한다. 즉, 공동체는 단지 구성원들만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폐쇄적 개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개방적 지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는 명분으로 공동체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오랜 동안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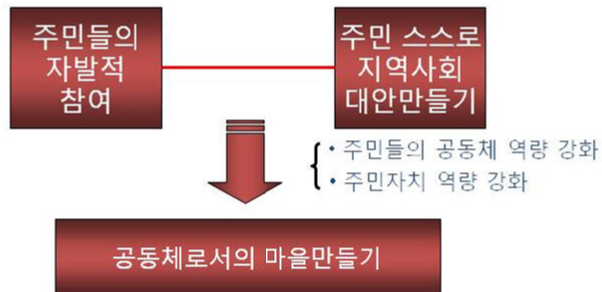
결국,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의미

→ 그러한 사업은 매우 창의적으로 다양하며, 기존의 다양한 참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음

31 :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자 구체적 실천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은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기존의 제도 및 정책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 사례들



32 :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사례들

결국,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자 과정 그리고 원리로 삼을 때 가능하며, 참여 주민들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이루기 위한 사업 및 실천의 과정은 사업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그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성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영향의 핵심적 내용은 참여자들의 공동체 역량 및 주민자치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마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려는 다양한 시도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어떤 주제와 방법으로 만들고 발전시킬 것인가와 관련한 시사점을 줄 만한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33 : 마을만들기 1

흔히들 마을 만들기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곤 한다. 하지만, 마을이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서울 방배동 양지공원

- 서울시가 전문가 파견하여 실시
- 주민이 기획과정에 참여
- 주민의견 반영한 공원 건설
- 공원의 모습도 주민이 결정

주민참여 + 물리적 환경개선 사례

그러나, ...

예쁜 공원만 만들어 지고,
주민참여는 중단



마을만들기가 아닌
주민참여형 공원만들기

34 : 마을만들기 2 - 양지공원 사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면, 서울시 방배동의 양지공원 사례를 하나의 예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양지공원 사례는 서울시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주민들의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들의 의견대로 멋진 공원을 만든 사례이다. 하지만, 공원이 만들어진 후 주민들의 참여는 멈추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마을만들기 모범사례라 할 수 없다. 그보다는 주민들이 주도한 또는 참여한 공원만들기 사례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울 은평구 갈곡리 어린이 놀이터

- 주민모임 구성하여 스스로 주도
- 많은 주민들 의견수렴과 실행
- 공원 개선 전후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주민모임 지속 → 녹색가게 설립 등으로 발전
- 주민참여 + 물리적 환경개선 + 공동체 행사 + 주체(마을사람)형성

35 : 마을만들기 3 - 갈곡리 어린이 놀이터 사례

반면, 서울시 은평구의 갈곡리 어린이 놀이터에서 진행된 마을만들기 활동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 주민모임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초기 행정의 지원 없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결국 행정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양지공원과 두드러지는 차별적 모습은 이 어린이 놀이터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바뀐 후, 그 공간이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한 주민들은 ‘갈곡리를 사랑하는 주민모임’을 구성하여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녹색가게를 만들고, 이 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실천했다. 이는 양지공원과 비슷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주민조직에 의한 자발적 활동을 통해 비용 면에서도 양지공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 사업이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 사례라 할 만하다.

마을공동체 이해와 활성화 방안

-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하는 개별 사업 아님
- 개별 사업은 공동체(마을)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지속성, 마을사람(주체) 형성이 중요

36 : 마을만들기 4

결국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에 의한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공동체 사람을 이 과정에서 만들고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러한 과정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필요한 것이다.



동대문 품앗이 공동체

사진 출처: <http://webzine.munjang.or.kr/article/content.asp?pCate=15&pID=142>



- 개인의 육구를 공동체적으로 해결
- 대부분 육아 품앗이가 폐쇄적 공동체로 남으나, 동대문 품앗이는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이는 데에 주저하지 않음
-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까지 참여하는 발전

37 : 동대문 육아 품앗이 공동체

육아를 매개로 한 품앗이 공동체는 개인이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전업 주부가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려야 하는 어려움을 공동체를 통해 상호 순환하며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본다는 점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이다. 동대문 품앗이 공동체도 28개월과 5개월 된 자녀를 키우던 황씨가 육아의 어려움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취지로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황씨는 지역 인터넷 게시판에 공동육아를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이들이 모여면서 육아 품앗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육아 품앗이는 주부들의 육구에 매우 잘 조응하는 사업이라 많은 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렵게 형성한 자신들만의 폐쇄적 공동체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대문 품앗이 공동체는 이를 잘 극복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육아 품앗이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우연히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가 운영하는 지역의 방과후 공부방 간판을 보고 오전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다 이 곳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좋은 육아에 있어 어린이 도서관은 이들의 욕구에도 맞는 매력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주부들을 만나면서 육아품앗이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이들이 육아 품앗이를 새롭게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들 품앗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행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공동체의 개방성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타 육아 품앗이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는 단순히 개방성이라 표현하기보다는 ‘띠앗’(초기 명칭, 형제자매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정이라는 순우리말)에 기초한 공동체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이 사례는 육아의 공동분담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공동체 식구들이 육아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부산 반송동 느티나무도서관

사진 출처: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66>



대전 중촌동 짜장 어린이 도서관

사진 출처: <http://daejeonstory.com/3432>



- 주민들이 스스로 모금하여 건립하고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 단순한 도서대여를 넘어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기능
- 이 공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에 기여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착한 에너지 지킴이 모임

사진 출처: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r=view&uid=223127>



- 주민들이 스스로 모금하여 건립하고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 다양한 주민소모임 진행 → 우리 동네 절전소 만들기 운동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으로 확대/발전
- 마을학교 건립 추진 등 주민들의 참여는 아직 진행 중
-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

38-39 :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어린이 도서관 사례

부산의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반송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도서관은 동네 주부들의 수다를 통해, 항상 떠나고 싶은 동네가 아닌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동네에서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느티나무 도서관을 만드는 데에 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대전 중촌동의 짜장 도서관과 서울시 동작구의 성대골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례들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운영도 주민들이 직접 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양적, 질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활동들로 확산되었다. 성대골 도서관의 경우, 최근에는 마을학교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만들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지역에서 매우 많이 발견된다. 대전의 알짬 도서관, 대전

철암마을의 철암 도서관, 인천 가좌동의 청소년 인문학 도서관 ‘느루’, 서울 도봉구의 ‘초록나라 도서관’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도서관 사례들은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과 이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서 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 공동체의 당연한 일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부산 물만골 공동체

사진 출처: <http://s2yon.tistory.com/293>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damotoli/7280848>



-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대신 공동체 형성과 생태마을 만들기를 선택하여 추진
- 공동체 출자 통해 땅을 매입하여, 그 곳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진행
- 매달 주민총회 개최하여 마을 대소사 결정
- 황령산 생태계 복원과 주민 자활사업, 각종 공동체 행사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 진행

40 : 도심속 생태공동체 물만골 마을

부산의 물만골 마을은 철거가 예정되었던 산동네 주민들이 재개발 대신 땅을 매입하여 생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10여년 전부터 시도한 사례이다. 생태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은 단지 공동체 출자를 통해 땅을 매입하고 계속 함께 살아간다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이 저소득층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자활사업 등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 증진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 지역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보다 대안적 공동체의 사례로 주목 받는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자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달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물만골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실천한다.



대전 한발레츠 지역화폐
사진 출처: <http://me2.do/vhNgxt>



과천 품앗이
사진 출처: <http://me2.do/FZlda6P>



- 공동체를 통한 대안적 상호부조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화폐운동
- '돈'을 중심이 아닌, 사람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적 교류
- 단순한 노동력의 교환을 넘어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
- 대전, 과천, 서초, 성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규모로 시도 중

41 : 지역화폐

지역화폐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거래를 공동체적 상호부조 관계망을 통해, 즉 돈을 통하지 않고 상호 노동력을 교환함으로써 대안적 경제관계를 만들어 내는 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화폐에서는 돈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도움을 주고 받는 성의와 노력 등이 거래되고, 이를 통해 공동체적 관계망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비단 우리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20세기초반부터 외국에서부터 시도되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레츠(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라 부른다. 지역 화폐는 국가 화폐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구성원끼리의 합의에 의해 사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민의 노동 성과를 외부로 빼앗기지 않고 지역 내에서 축적·순환하게 하는 뛰어난 도구이다. 이 운동은 1930년대 경제공황기에 유럽과 북미에서 시도된 것이 초기 형태이다. 근래에 나타난 지역화폐의 활성화는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에 마그리트 케네디라는

_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인물이 호주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지역화폐 협회(Regiogeld Verband)를 결성한 것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이 지역화폐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전의 ‘한발레츠’를 꼽을 수 있다. 이 사례는 1999년 회원모집을 시작해 2000년 공식 출범했다. 2008년 기준으로 620가구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발레츠에서는 ‘두루’라는 지역 화폐를 유통한다. 이 화폐를 버는 방법은 간단하다. 회원 사이에 품앗이와 물물교환과 같이 노동력을 제공하면 두루를 받을 수 있다. 받은 화폐는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회원들의 재능을 살 수 있다. 대구에서도 ‘늘품’이라는 지역 화폐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과천에서도 ‘아리’라는 단위의 지역화폐운동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이 지역화폐운동이 실천 또는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데, 화폐 단위의 명칭은 지역마다 모임마다 약간씩 상이하나 그 운영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화폐운동이 그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점차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공동체적 관계를 통한 대안적 경제관계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http://www.facebook.com/Travel00>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
KOREA CONSUMER COOPERATE ALLIANCE

사진 출처: <http://me2.do/Gb4k8PC>



2012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milkyspa/16900323>



- 시장 중심의 경쟁이 아닌 협동과 상호부조라는 공동체 관계망 구축
- 공동체를 통한 일상생활 영위의 가능성 제시

42 : 다양한 협동조합운동

협동조합도 지역화폐 등과 비슷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공동체를 통한 대안적 경제망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이다. 협동조합은 보통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그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공동구매를 하거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하는 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생활, 여행협동조합 등으로 그 주제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시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상호부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경제 질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그 외에도 주민들의 자치적인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



관악사회복지의 이웃나눔 사랑방
사진 출처: <http://slowalk.tistory.com/1120>



방학동 도깨비 시장 내 도깨비방
사진 출처: <http://panin.news.nate.com/info/252410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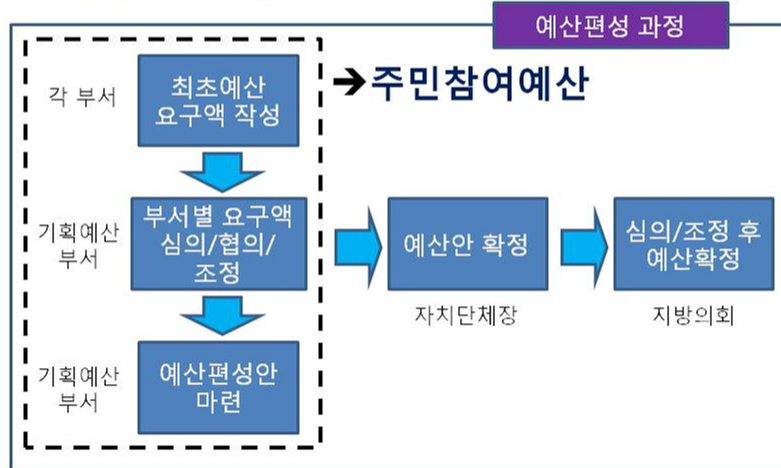


- 마을 기업, 재활용 가게 운영,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과 활동들
- 자치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활동을 하는 주민 모임들은 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43 : 그 외에도 마을기업, 녹색가게로 대표되는 재활용 가게 등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고 이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관악사회복지의 ‘이웃나눔 사랑방’, 도봉구 방학동의 ‘도깨비방’ 설립 및 운동 사례 등등이 그것이다. 이웃나눔 사랑방은 일종의 재활용 가게로 이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이다. ‘도깨비방’은 주민들과 공동예술가들이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만든 공간으로, 주민들이 부담 없이 들러 이웃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거나 책을 보고 지인을 기다리는 등 주민들의 쉼터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며, 공방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자치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모두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들이다.

제도 및 정책 관련 사례들

주민참여예산제



44 : 제도 및 행정 정책을 통한 마을 형성 사례들도 결국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그 의의가 달성된다. 단지 제도 및 정책만으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행정이나 제도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의 제도나 정책은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의 공간을 넓혀주고 그러한 활동에 사회적 공신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한 첫 번째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소개할 수 있다. 예산을 한 마디로 간단히 정의하면 행정의 정책이자 사업이다. 행정의 사업 및 정책은 모두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쓰임새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기에 그 편성 및 집행은 행정의 것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러한 취지로 도입·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행정이 일방적

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으로 결정하던 것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회의 심의는 단지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것에 한정되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예산편성 단계이다. 즉,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모두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 참여예산은 시민의 세금인 자치단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 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이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다른 주민들의 요구와 조화시키는 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음
- 결국, 이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구성원들이 그러한 공동체적 통치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45-46 : 이 참여예산의 의의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예산제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공공적 필요나 욕구를 물어봐서는 곤란하다.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해 개인적 필요나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공공적 욕구로 조화시키는 경험을 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장 공공적 욕구를 제안하는 것이 익숙치 못하다. 이래서는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는 방법은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 수렴된 욕구와 필요를 예산에 편성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가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를 이웃의 필요 또는 욕구와 조화시키는 주민자치의 능력을 훈련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성공적인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공동체의 이해로 조화시키는 훈련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원탁회의(1,000명 참여)

사진 출처: <http://www.vop.co.kr/A00000529548.html>



- 정책결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이러한 '타운 홀 미팅'은 충남, 경남, 전북 군산, 충남 논산, 서울 은평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
-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정책은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함

47 : 지난 2012년 8월9일 서울시민 1,000명은 잠실 올림픽 펜싱경기장에 모여 서울시의 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원탁회의에 참여했다. 이 원탁회의는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원탁회의는 서울시 이외에도 지난 2010년 충청남도에서도 시행되었고, 그 외에도 경상남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된 바 있다. 이러한 원탁회의가 유행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로 번진 이유는 그간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일부 전문가와 정치지도자 및 행정이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한 것을 보완해,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행정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적인 의사결정을 시도하고 추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시민배심원제(서울시, 수원)
 사진출처: <http://cbci.co.kr/?p=85655>

**시정정책토론 청구제
(안산, 청주 등)**
 사진출처: <http://ngoiksan.or.kr/62>(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 주민의 문제를 행정이 아닌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적 문제해결 시스템 구축
- 주민들에 의한 자구적 대안 마련과 이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효과 기대

48 : 시민배심원제와 시민정책토론 청구제 등은 모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전문가나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그 해결을 맡기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다른 제도 및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행정 및 정치 지도자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공동체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2011년 시민배심원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 등에 의해 행정의 정책 및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서울시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의 배심원은 애초 외부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들이 증재한다는 주민참여정책으로서의 의의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시민정책토론 청구제는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된 곳에서 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안산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이다. 안산시의 경우,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이 접수되면 반드시 시민들이 해당 사안을 토론허기 위한 모임이 개최되도록 하였고, 개최 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제안 시민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케 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선거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가 접수되면 정책토론허청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청구제는 비록 주민들이 직접 결정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 및 요구를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공동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들도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례들은 보다 풍요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49 : 이외에도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하고 많은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들 하나하나가 완성된 마을공동체 사례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공동체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들도 모두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마을공동체는 계속 진화해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전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네에 성미산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50 : 공동체는 이러한 사례 하나 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화해 갈 뿐이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앞선 사례를 그대로 인용해도 좋은 전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사람들이 흔히 성미산 공동체의 사례를 인용하곤 하지만, 모든 동네에 성미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성미산의 사례를 온전히 우리 동네에 이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동네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우리 동네의 자원과 사람들에 기반 해 시작하고 형성되어 가야 한다.

결국,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권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 이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고
- 주민들의 공동체 운영능력(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것
- 결국, 이는 지역사회를 공동체적 문화와 질서로 재편하는 과정

51 : 결국,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권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들의 공동체 운영능력(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이다. 결국, 이는 지역사회를 공동체적 문화와 질서로 재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이러한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과 실천은
이제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세로 확산되고 있음.

52 : 그런데,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과 실천은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세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남고, 행정과 정치지도자들의 참여와 결정에 의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community building(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이라는 슬로건이 점차로 많은 이들에게 그 공감대를 넓혀가는 실천적 구호로 확장되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53 : 일본의 마을만들기도 그러한 외국 사례의 하나이다. 애초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지 않으면 그 사업기간도 한정 없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저항과 갈등 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면서 활성화되었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는 마을만들기가 이와는 좀 다르게 앞서 소개한 사례들과 같이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운영한다는 주민자치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 총리의 세제개혁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자,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urbanspace.com/>

●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 유럽 및 북미의 지역개발은 대부분 도시재생 방식으로 이루어짐
- 그 핵심적 내용은 물리적 개발만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관련한 복지, 문화, 치안, 교육,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 핵심적 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재생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 →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
- 미국 로체스터 시의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도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례 중 하나

54 :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북미의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도시재생의 핵심적 개념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물리적 시설의 개선만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복지, 문화, 치안, 교육, 일자리 창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핵심적 내용은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많이 거론되는 미국 로체스터 시티의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사례 역시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이다. 유럽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업의 적절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demo.egloos.com/m/439795/>



브르뚜 알레그리 참여예산, 지역총회 장면.

사진 출처: 읍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참여예산 등 다양한 참여제도 및 정책 확산

- 80년대와 비교해 90년대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도 및 정책 활용사례 2배로 늘어남(브르노 카우프만 외(2008),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이정옥 역, 리북, 12쪽 참조)
- 이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함께' 기획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가 단순히 자체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

55 : 이외에 외국에서도 참여예산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즉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사회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및 활동들이 점차로 확대·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스위스의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년대와 비교해 90년대 들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도 및 정책 활용사례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브르노 카우프만 외(2008),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이정옥 역, 리북, 12쪽 참조). 이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함께' 기획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가 단순히 자체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발전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56 : 행정 및 전문가 등 지원 그룹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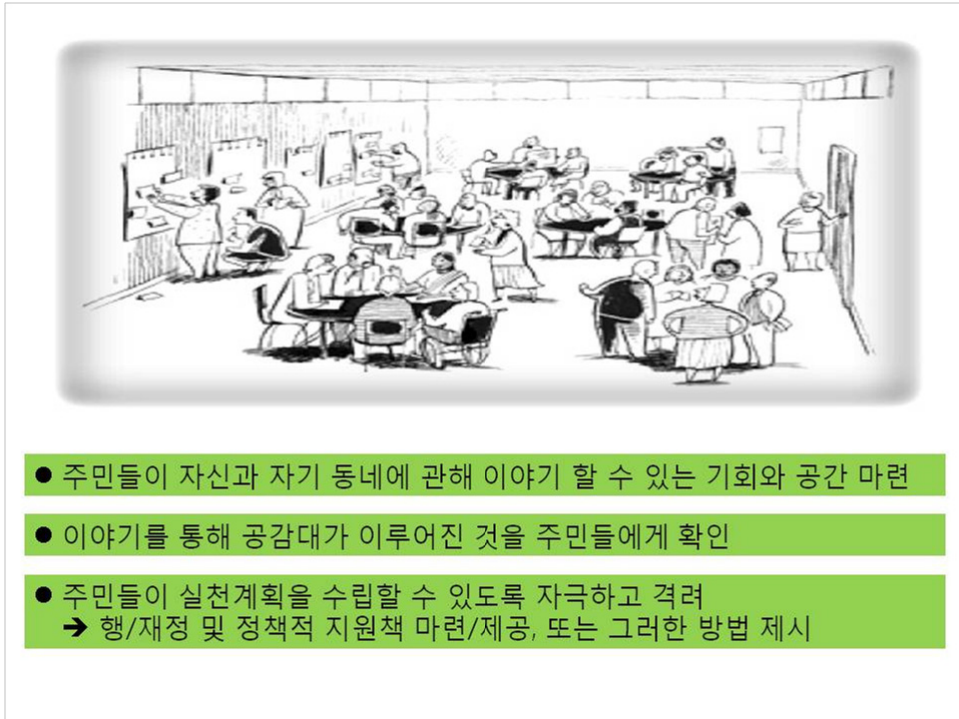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행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중요성은 주민들의 주체적인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나타난 잘못된 현상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행정은 재정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압박하고,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기 전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방법들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들로 인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여러 우려와 한계들이 도출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러한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행정과 전문가의 역할에서도 그러하다. 앞서 행정과 전문가 등의 역할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개념으로는 활성화·촉진자(facilitator), 중재자

_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moderator), 매개자(coordinator)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신이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과 전문가 등 지원그룹은 주민들의 주체적 기획과 실천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57 :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와 전문적 활동가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업과 추진방향을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이를 설득하는 것은 마을공동체라는 성과로 나아갈 수 없다.



58 : 마을공동체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노력은 주민들이 자신과 자기 동네에 관해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가능한 많이 그리고 자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행정이나 전문가 그룹 등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고, 정책 및 제도 역시 주민들에게 그러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주민 당사자들이다. 일단, 주민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 그 이야기 속에서 공감대로 형성되는 것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공감대에 대해 그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며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행정 및 전문가 등 지원 그룹이 해야 할 핵심적 역할이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기획함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들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면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경우 공동체적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교육 등

의 지원도 지원 그룹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으면, 지원 그룹 등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의 내용과 실천에 참여하는 주민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은, 교육이 필요한 당사자들의 절박한 욕구가 있어야 교육효과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육내용이 정해진다면, 성공적인 교육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점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행정 또는 전문가, 지원 그룹이
가장 피해야 할 것들

돈 지원부터 약속하기

사업계획 들이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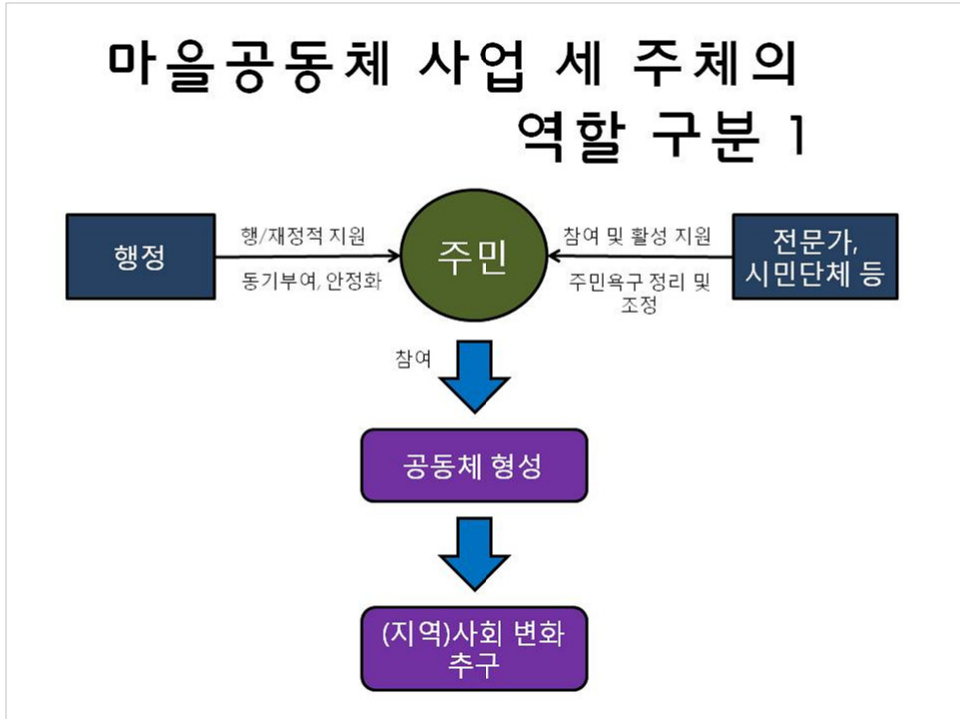
조급하게 주민 '쫓기'

59 :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나온 경험들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참고 삼아,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을 비롯한 전문적 지원그룹이 피해야 할 사업 방식 중 핵심적인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돈부터 지원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마을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함께 실천할 일거리를 만들고 이에 돈이 필요하다면, 그에 적절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돈부터 지원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데로 관심이 쏠리곤 한다. 이는 오히려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떠냐고 주민들을 설득 하려는 것도 피해야 할 사업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의 내용이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것이라 할 지라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도, 누군가 외부에서 이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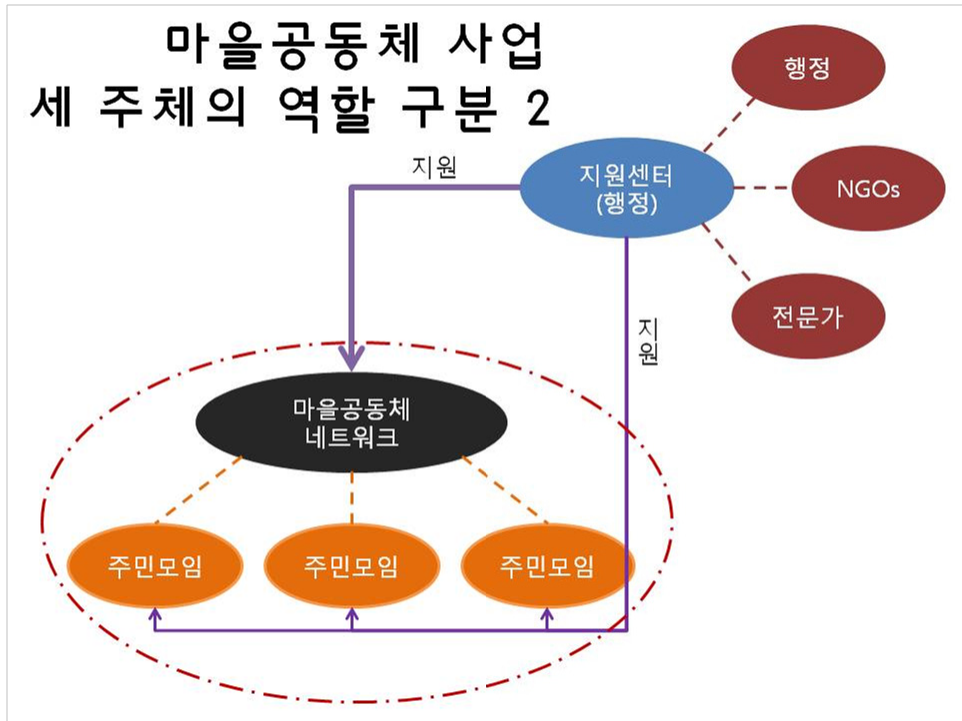
한 참여를 설득하게 되면 주민들은 그 일을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라 여기기보다 자신을 설득하는 이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심리이다. 결국, 주민들이 자신의 일로 삼아 실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게 하라’라는 명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셋째,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재촉하는 것도 마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행정의 경우에는 예산의 사용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지출된 예산 대비 가시적 결과물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행정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마을공동체는 행정이 주도권을 쥐어서는 곤란하다. 어쨌든,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공적인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하고 관계된 모든 주체들이 ‘여유와 기다림’의 가치를 서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60 :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 및 전문적 활동가들을 세 주체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 주민의 역할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시작과 끝이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며 주체이다.
- 행정의 역할은 주민들의 실천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천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참여와 실천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다. 여기서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참여한 주민들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은 자신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또는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그 활동가들의 역할은 주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 주고 행정과의 관계를 중재하며,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를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실천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먼저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는 행정의 동기부여와는 달리 주민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61 : 또 다른 차원,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들 간의 역할을 그림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자치구에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이 지원센터에서 행정과 전문가 그룹 등의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절히 그리고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이나 행정으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원센터가 하는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천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전문적 지원기능을 갖춘 이들이 개별적으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종합적 지원이 주민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개별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그 네트워크가 각각의 주민모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_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마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을들이 우리 지역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마을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은 중요하다. 이러한 마을들 간의 네트워크는 기초자치단체라는 행정적 틀 내에서 우선적으로 건설될 수 있지만, 점차로 그 네트워크 역시 넓혀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위로부터 설득되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원 그룹의 적절한 역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닥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필요와 욕구가 있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위한 실천계획 수립 위한 한 가지 방법(예시)

PAR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주민들이 동네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천계획이 도출

62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한 가지 추천할 만한 방법은 PAR(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이다. 이 방법은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많이 시도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지역조사를 주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조사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직접 하고 이에 대한 분석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이에 참여한 주민들 간에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들은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동(실천) 계획(action plan)을 도출하고 합의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기 쉽다. 따라서 PAR은 단순한 조사방법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63 : PAR이라는 과정과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많이 활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동네 한 바퀴’이다. 동네 한 바퀴는 주민들이 조를 나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관찰자적 입장으로 둘러보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그 자체로도 주민들이 만든 지역발전계획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에서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이슈)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바탕이 되면, 참여자들이 다함께 모여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도록 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러한 ‘동네 한 바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PAR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실천과제들은 ‘마을의제’라 할 수 있다. 마을의제라 하는 것은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합의한 실천과제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을의제를 주민들이 직접

합의하여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회적인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사업들이 도출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64 : 결국, 마을공동체란



65 : 주민들이 동그렇게 모여 서로 자신과 자기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고,



66 :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67 : 서로 공감한 내용들을 자신들끼리 묵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 있어서는 행정 및 지원 그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하도록 주민들을 격려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68 : 결국 마을공동체란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하나씩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